

# 우유소비확대가 급선무...

협회 지도부 과장 \_ 이 혜 영

'02년 우유수급 대란 이후, 잉여원유차등 가격제와 쿼터제라는 이름의 비정상적인 생산제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FTA와 한EU FTA 추진은 낙농산업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올해는 더욱 전국단위 제도개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 잡히길 바랐으나, 지난 여름의 장관 토론회 이후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 ■ 원유가격의 시장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단위 제도개편 논의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04.12)과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 시안(05.7)에서 “낙농진흥회 집유체계의 유업체 직결전환”과 “원유가격

의 당사자간 합의 결정”을 제시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농업농촌대책은 농업회생을 위해 참여 정부가 향후 10년간 119조를 투·융자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낙농산업의 대책은 원유가격을 시장논리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협회가 내놓은 대응방안이 전국단위 제도개편으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7월 24일 개최된 낙농제도 개편 대책 소위원회

'05년 농림부 시안이 발표되자마자,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골자로 한 별도의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각각의 시안을 발표한 농림부와 협회간 논의로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뤘다. 그러나, 시행방안에 대한 이견차이로 지루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지난 7월9일 장관토론회를 물고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보기 좋게 어긋나고 '전국단위연합쿼터제'를 골자로 하는 농림부 수정안이 발표되었는데, 당초 농림부 안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7월 9일 농림부 장관주재로 개최된 우유 수급관리 개선방안 토론회(1차)

협회는 7월 24일 낙농제도개편 대책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부 수정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협회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동안 협회와 협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전국단위쿼터제 실시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없었으며, 생산자의 거래교섭력 강화를 위해 설치를 검토키로 한 생산자보드 설립과, 낙농진흥회 농가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원유거래(쿼터, 가격)를 생산자와 유업체간 직접 하는 방안으로 농림부 당초안과 맥락은 같다고 지적되었다.



8월 2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납유 임원·도(연합)지회장 간담회

또한 8월 2일에는 제도개편이 전체 낙농가의

문제이지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등 진흥회 농가에 국한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흥회에 납유하는 임원, 도지회장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은 근본적인 전국단위쿼터제 방안과 농가 안전장치 마련, 농가 안전장치 없는 직결전환은 반대, 협회를 단일창구로 하여 농림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진흥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기자간담회

(감축후목표생산량까지)은 말할 나위 없었다.

장관토론회 이후, 차관주재의 토론회가 8월 2일 한차례 더 있었다. 협회는 당연히 말만 바뀐 농림부 수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유업체 또한 반대입장을 제시하였다.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는 하나, 물론 각론에 있어서는 각 주체간의 입장차이가 있었고, 반대하는 속내도 제각각으로 이날 회의에서도 어떠한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 이후 실무자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였으나,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논의한 들 결론을 도출하기는 만무했다. 단지, 쿼터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만 공감되었으며, 전국단위연합쿼터제와 무관하게 농림부가 쿼터조사를 실시한다는 것과 원유 가격산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 ■ 우유소비확대, 국정감사와 대선...

전국단위제도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지면서, 아마도 차기 정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다는 조심스런 전망들이 나왔다. 낙농정책의 핵심은 우유수급 안정대책이다. 수급안정이라하면, 소비를 확대하던지, 생산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2002년을 정점으로 매년 우유생산량이 줄어 낙농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최고의, 또 최선의 방법은 우유소비 확대가 되겠다.

따라서, 협회는 8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정감사 및 대선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낙농육우 문제를 해결키로 결의하였다. 곧장 협회는 농가 여론을 수렴하고, 국감요청사항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점검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였고, 10월 31일에는 기자간담회를

### 〈국정감사 요청사항〉

- 한미FTA 무효 및 한EU FTA 협상 중단
- 실질적인 전국단위제도개편 방안 마련
-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환급
-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방안 마련
- 축발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 낙농·유제품 관세체제 정비
- 브루셀라 방역대책 및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
- 육우산업 대책 마련
-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마련

### 〈대선공약 요구사항〉

-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
-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
-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 유지
- 육우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북한어린이 우유지원 제도화

통해 낙농육우 분야 대선공약 5대 과제를 발표, 관철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금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군 우유급식 용량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 활동하였는데, 국회 농해수위원, 국방위원, 예결특위 의원들과의 면담을 가졌었는데, 시각 차이를 재삼 느끼게 되었다. 지난 2002년 당시 군 우유급식을 300ml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조정된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낙농가들만 잘 살자고, 우유소비만 확대하자고 군 우유급식 용량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 벽을 허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 ■ 2008년에는...

지난 한 해동안은 한미FTA 타결은 물론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한EU FTA 협상 추진, 유가 상승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낙농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08년이라고 해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 낙농정책의 핵심은 우유수급조절대책인 만큼, 어떻게 우유수급 안정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데, 장관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수가 “낙농정책은 곧 생산자의 정책이다”라고 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

정 낙농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12월 중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를 끝으로 협회 올해사업이 마감될 듯 하다. 올 한해는 FTA와의 전쟁이었고, 우리 스스로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해였기에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 FTA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언제까지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감, 대선정국과 연계하여, 낙농산업의 중장기 대책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무허가 축사 문제, 학교우유급식제도화나 군 우유급식 용량 확대 등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어떠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전국의 낙농가들의 힘과 노력이 보태진다면, 중국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